

채권·파생상품 거래 '뚝'… 공모펀드서 8.2조 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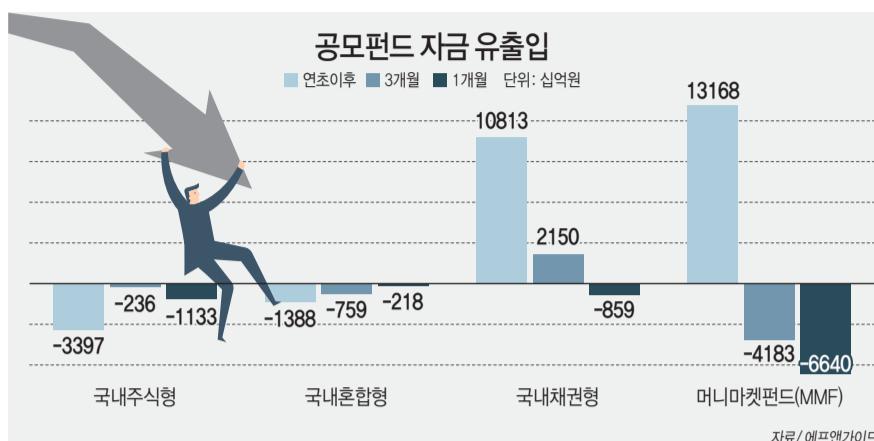
한달간 채권서 8600억 빠져나가
MMF 6.6조, 주식형펀드 1.1조 유출

美·中 무역분쟁·경제위축 등 악재
연말까지 투자심리 위축 계속될 듯

주식과 펀드 등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국내 설정된 공모펀드에서는 투자자금이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저금리시대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아온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상품 시장도 빌행이 줄어드는 등 위축되는 분위기다.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10월 4일 기준)간 국내에 설정된 공모펀드에서 8조1620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국내 주식형은 물론 안전자산으로 시중자금이 쏟아진 채권형펀드에서도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 채권 등 안전자산에서도 자금 유출

해당기간 국내 채권형펀드에서는 8590억원이 빠져나갔다. 연 초 이후 10조8130억원, 최근 3개월 2조15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과 비교하면 최근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출세가 눈에 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채권금리가 확산되

며 채권가격 부담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채권시장은 내년에 경기부양을 위한 슈퍼예산 편성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며 수급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흔히 잠재 투자 수요로 분류되는 머니마켓펀드(MMF)에서도 자금 유출이 가파르다. 연 초 이

후 13조1680억원이 순유입된 것과 비교해 최근 한 달동안 6조6400억원이 순유출됐다.

통상 MM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주식 등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시그널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1조1330억원이 순유출 됐고, 9월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연 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 파생상품은 기피 대상

이같은 상황에서 비교적 중위험·중수익의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파생상품 시장에도 멍구름이 드리웠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손실을 내며 수요와 공급이 모두 얼어붙은 터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DLS 발행금액은 총 1조3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2조192억원)에 비

해 32.2% 급감한 수치다. 지난 6월(3조1465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주가연계증권(ELS)은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난달 ELS 발행금액은 5조 1796억원으로 전월(6조275억원)보다 3.0% 증가했지만 이는 홍콩 시위 사태로 8월 발행금액이 위축된 영향이 크다. 특히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H지수를 담은 ELS 상품이 조기상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ELS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금리 지속에다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확대된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산이 외면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 “연말까지 미중 무역분쟁, 경제 위축 등 대내외 악재가 가득해 투자 심리가 살아나길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휘발유값 6주째 ↑, 상승폭은 둔화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 8월 말부터 6주째 상승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3% 상승한 1당 1천543.3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年 7만원 인상

실업급여 보험료율 0.3%p 인상에 10년간 추가 보험료 20.2조 달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이번 달부터 인상되면서 근로자는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10년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 총액은 20조2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만5000원이다. 내년엔 6만2000원, 2024년 7만1000원, 2028년에는 8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7만1000원이란 추산이 나왔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2000원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은

올해 1곳당 연간 8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엔 36만1000원, 2024년 41만1000원, 2028년 46만9000원 등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기업 1곳당 매년 평균 41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380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기업 1곳당 추가 부담액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적으로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액에 5.8을 곱해 산출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규모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3만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231만개, 1개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평균 5.8명이다. 예정처는 보험료 수입은 피보험자의 보수총액 전망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했다. 보수총액 전망치는 예정처의 피보험자 수 증가율과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추정했다.

/석대성 기자

개인대환 연 96조 3년간 288조 달해

개인이 새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규모가 최근 3년간 288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 평균 96조원이 대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총 32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

의원실은 차주가 신규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기존 대출 잔액이 절반이하로 내려간 경우를 대환한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요 대환 대상은 카드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이었다. 전체 74%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카드론을 먼저 대환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23.5% ▲60대 -4.2% ▲70대 -9.5% ▲80대 이상 -11.5%다.

김 의원은 “20대 청년은 금융이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제2·3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

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고금리로 떠밀려 늘어가는 청년의 부채·파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고통은 개인만의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 활력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韓기업 해외보유 소득 5년간 2.2조 달해

» 1면 ‘활기잃은 韓경제…’서 계속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133만명에서 180명으로 35%가량 증가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근로소득 세수는 3배나 증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유의원실 입장이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자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낸 소득을 들여오지 않고 두고 있는 모양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 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최근 5년간 2조2000억원에 달했다. 2014년 3211억원에서 지난해 5606억원으로 75%까지 급증했다.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하면 소득이

발생한 해외 국가 뿐 아니라 자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 이윤은 줄고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실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 평균 13.3% 증가했지만,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평균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은 497억8000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억9000달러의 3배에 달했다.

선진국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던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박 의원은 “해외소득 과세 면제로 늘고 있는 유보 소득을 국내로 유입할 방도를 찾고,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 조세 경쟁력을 높여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